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5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교육청 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함(안 제3조).

- 나. 각급 기관의 장에게 중증장애인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정함(안 제5조).
- 다.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각급 기관의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6조).
- 라.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채용된 인원은 가장 근거리에 배정하도록 정함(안 제7조).
- 마.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중증장애인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 바.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 장애인사업모니터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사. 업무능력이 우수한 중증장애인 및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교육 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1052jjh@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교육청 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요계획의 제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채용 및 배정) ①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원은 교육감이 채용하며,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을 각급 기관에 배정할 경우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교육)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

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3. 그 밖에 상담, 복지, 특수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모니터단의 활동)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의 상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모니터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단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수당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모니터단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니터단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교육감은 업무능력이 우수한 중증장애인 또는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단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수립한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 추진방안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

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중증장애인 인건비 및 일자리 사업 운영

○ 관련 조문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감안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2%

· 최저임금: 6.1%('13) → 7.2%('14) → 7.1%('15) → 8.1%('16) → 7.3%('17)

※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 변동에 따라 추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연도별 사업 운영 인원 증가율을 감안하여 추계

- 향후 5년간 사업 운영 인원 증가율: 전년 대비 10%

· 운영 인원: 92명('17) → 101명('18) → 111명('19) → 122명('20) → 134명('21)

※ 향후 장애인 채용 인원 변경에 따라 추계치는 변동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 7,694,290천원 / 5년간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별첨)

라.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없음

5. 작성자 : 행정과 육상숙(042-616-8694)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1,080,454	1,272,634	1,498,034	1,767,934	2,075,234	7,694,290
자체수입		1,080,454	1,272,634	1,498,034	1,767,934	2,075,234	7,694,290
세 출		1,080,454	1,272,634	1,498,034	1,767,934	2,075,234	7,694,290
인 건 비		1,071,140	1,262,500	1,487,400	1,756,800	2,063,600	7,641,440
운 영 비		9,314	10,134	10,634	11,134	11,634	52,850
재원 조달		1,080,454	1,272,634	1,498,034	1,767,934	2,075,234	7,694,29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80,454	1,272,634	1,498,034	1,767,934	2,075,234	7,694,290
	자체수입	1,080,454	1,272,634	1,498,034	1,767,934	2,075,234	7,694,29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